

정부, 중소기업 투자부진 실태조사

정부는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투자 부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파악해 금융·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재경경제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투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어 중소기업이 전반적인 투자부진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 5천개, 금융기관 관계자 1천여명, 대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상대로 중소기업 투자자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조사작업을 끝내고 2~3주간 분석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광범위하게 문제점을 짚어내고 해결책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업종별 조합에 전자상거래 구축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업종별 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원사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 32억원을 투입하여 16개 조합·단체(신규개발 14개, 업그레이드 2개)를 업종 클러스터로 선정·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16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이내, 클러스터별 4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정보화경영을 위한 상시적 교육 및 기초 컨설팅을 제공한다.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품질검사·인증, 창고관리시스템, 웹EDI 등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업무지원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영효율 및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는 한편, 비용 절감의 효과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 중소기업 수출 지원강화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수출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성사될수 있도록 중소기업 '밀착 지원'에 나선다. 무역협회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전시회에서 상담한 유력 바이어를 국내 수출현장에 초청, 해당 기업과 일대일 수출상담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국상품전시회에 참여한 국내 81개 중소기업이 상담한 해외 바이어 가운데 국내 방문시 수출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 20명을 초청한다.

무역협회는 이달 중 두 차례에 걸친 초청행사를 통해 해외 바이어의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하고 상담을 위한 현장 지원도 실시, 중

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이재형 무역협회 전시컨벤션팀장은 “실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참가 업체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 일대일 맞춤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우선공급 쉬워져

중소기업청은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격을 기존 10년 이상 근속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5년 이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25.7평 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국민임대 주택 △공공분양 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인 주택) △공공임대 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 이하인 주택) △민영주택(85㎡ 이하)이 이에 해당된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부가통신업을 비롯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의미한다. 또한 확보된 주택에 대해 장기근속 중소기업 근로자의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처분 제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대상자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생산직 재직기간 기준을 삭제 및 동일직장 근속기간 점수를 확대하는 등 대폭 현실화시켰다.

개정조합법 7월29일 시행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복수조합 설립이 허용되고 사업조합은 업무구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공포 2006년 4월28일), 오는 7월29일 시행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동일 업무구역·동일업종의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시행령의 영위업종 중복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복수조합설립이 가능하게 돼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법률에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조합 및 단체에 대해 '휴면제도'를 도입, 시행령상에 휴면조합·단체 지정제도의 세부운영절차를 마련해 휴면요건 및 이의 통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휴면조합·단체제도는 조합 또는 단체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중앙회나 연합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29일 시행된다.



중소기업공공구매 대출사업 추진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구매 론(Loan)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업은행 등 6개 은행 대표와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공공구매 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 입찰에서 낙찰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확보와 원활한 납품을 지원키 위해 도입되는 공공구매 론 사업은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한국기업데이터가 공동으로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평가, 자금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사업이 실시되면 은행은 우량 중소기업을 쉽게 선별해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발주한 물품을 적기에 납품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중소기업청은 설명했다.

또 위원회에 참가한 기업은행 등은 환율급락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1조원 규모의 기술평가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기업·국민·하나은행은 각각 3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기업은행 등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모두 2조7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으며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도 신용대출을 총 4조8천억원 가량 증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온라인 정보보호 훈련장 국내 첫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이홍섭)은 최근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방법 등을 무료로 훈련할 수 있는 온라인 중소기업 정보보호 훈련장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시스템 관리자들이 공개 보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중소기업 환경에 적합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바이러스 윌 등을 저비용으로 구축,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훈련장은 정보보호기술 훈련장(www.sis.or.kr)사이트에서 먼저 회원으로 가입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ISA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 투자 수준이 열악하다”면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추가비용 없이 정보보호 환경을 구축, 더욱 손쉽게 기업의 주요 자산과 정보시스템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진공, 취업연수사업 참여업체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인력난과 대졸자 취업난을 해소키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공계 대졸 취업연수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대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취업연수는

기본 공통연수(4주), 전문기술연수(8주), 기업현장 연수(8주) 등으로 짜여졌다.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기업은 기본·전문기술 교육을 통해 숙련된 연수생을 인턴형식으로 고용하게 되며 연수가 끝난 후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연수생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sbti.sb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살리자’ 진흥원 공식 출범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진흥원’이 지난 12일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진흥원은 정책개발기능과 함께 소상공인 각종 통계DB 구축, 전문인력 양성, 업종별 비즈니스모델 개발,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및 업종간의 교류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초대 원장은 권충식 전 총리실 복지여성심의관이 맡았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89.2%(268만개), 전체 근로자의 43.3%(512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책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어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업종별 특성 및 애로가 다양하고 지원대상이 광범위해 원활한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원을 계기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범위 축소하고 창업절차 줄여야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저 자본금제를 폐지하는 등 창업절차 간소화와 중소기업 범위 축소를 통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연구위원은 최근 상의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질 좋은 성장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위장 납입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최저자본금제도(5천만원)의 폐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구축, 창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의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지원 재원이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넓게 설정해 운용하면 상당수 중견기업이 정책의 수혜대상이 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제약할 수 있다”며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위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과 관련해 “작년에 정부 R&D 예산의 3.4%에 불과한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예산 비중을 올리는 4.0%, 2007년에는 4.5%, 2008년에는 5.0%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